

환경부, 국토교통부,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 설명자료	제 공 일		2019년 3월 19일
	소관부서	환경부	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안세창 과장 / 강찬 사무관 (044-201-6750 / 6767)
			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/ 정희영 사무관 (044-201-3364 / 3365)
		국토부	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채희연 과장 / 김윤우 서기관 (044-397-7216 / 7237)

제목 : 라돈 건축자재의 관리방안 마련 및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중
[국민일보 2019.3.19.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, 국토부,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.
- 2019.3.19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<1급 발암물질인데 “환기하라” 대답이 전부... ‘라돈 아파트 공포’ 전국 확산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검출에도 정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
-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, 기존 아파트의 제재 및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, 국토부, 원안위 설명 내용

- 환경부는 국토부, 원안위와 TF를 구성(2018.11),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
 - 관련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
-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

※ 공동주택은 2011~2014년 측정한 결과,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는 라돈 농도가 높지 않아*, 2015년 이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국 주택라돈조사를 실시해왔음

* 2011~2012년 단독주택(134.1 Bq/m³), 아파트(56.0) / 2013~2014년 단독주택(156.7), 아파트(74.7)